

#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의 원인과 중·북 관계

한상준\*

| 목 차 |

I. 서론	IV. 1956년 10~11월 폴란드·헝가리 사태와 중국의 외교활동
II. 한국전쟁 이후 중국의 외교 노선과 대북 정책	V. 북한의 중국인민지원군 철군 요구와 중국의 동의
III. 1956년 '8월 중파사건'과 중·소의 공동 간섭	VI. 결론

| 논문요약 |

1958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에서 최종적으로 철군하였다. 기존의 학계는 중국인민지원군 철군 문제를 1950년대 중반 이후 중·북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하면서 일정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사료의 한계로 인하여 철군이 실제로 결정됐던 정확한 시기를 밝힐 수 없었고, 철군의 원인과 배경을 중·북 관계의 측면에서만 분석했기 때문에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가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사료를 바탕으로 1956년 말 북한이 먼저 철군요구를 제기하여 중국이 철군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중·북 관계를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검토함으로써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에 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 당시 북한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요구했던 주요 원인은 1956년 '8월 중파사건'으로 인한 중·소의 공동 내정간섭과 1956년 11월 소련군에 의한 헝가리 정권의 붕괴가 북한에 끼친 영향과 충격으로부터 기인하였다. 반면, 중국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결정했던 주된 까닭은 중·북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여 동북아 국제정세의 안정을 추구했기 때문이었고, 또한 북한이

\* 북경대학교 한반도센터 연구원.

사회주의 진영을 이탈하거나 중·소와 대립하여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한편, 철군문제를 둘러싼 중·북의 입장은 양국 간 상호 신뢰가 견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중·북은 표면적인 우호·협력 관계와는 상반되게 서로를 불신하고 의심하였으며, 철군문제에 있어 북한은 정권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중국은 국익의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북은 적어도 철군문제에 관하여 양국이 긴밀히 연결되어 서로의 이해를 같이하는 ‘순치상의(脣齒相依)’적 관계는 분명히 아니었다.

- 주제어: ‘8월 종파사건’, 헝가리 사태, 사회주의 진영, 중국인민지원군, 중·북 관계

## I. 서론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당시 북한에는 약 120만 명의 중국인민지원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북한에 잔류했던 중국인민지원군은 정전 직후부터 1955년 말까지 단계적인 철수를 진행하였다.<sup>1)</sup> 중국은 1956년에도 중국인민지원군의 지상군과 해군, 공군 병력에 대한 철군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sup>2)</sup> 1958년 1월 1일, 북한 주둔 중국인민지원군 병력은 약 29만 명이었고(『Current Intelligence Weekly Summary』, February 13, 1958), 따라서 1953년 7월 27일부터 1958년 1월 1일까지 약 90만 명의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에서 철수하였다. 한편, 한국전쟁 정전 직후 남한에는 약 32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김일영/조성렬 2009, 90). 주한 미군도

1) 중국인민지원군은 1953년 7월 정전 이후부터 1955년 말까지 6개 軍, 포병 5개 師, 高砲兵 4개 사, 公安兵 1개 사, 鐵道兵 10개 사를 포함한 기타 특수 병과 부대 등을 비공개로 철수했고, 1954년 9월 16일부터 1955년 10월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9개 師를 공개적으로 철군하였다(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2000, 519-520).

2) 1956년 4월 4일, 중공 지도부는 약 4만 명의 중국인민지원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였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09, 1282). 1956년 11월 22일,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 해군과 공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09, 1328; 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00, 349).

정전 직후부터 군대를 철수하여 1958년 1월 1일에는 약 5만 명의 병력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었다.<sup>3)</sup> 1953년 7월 27일부터 1958년 1월 1일까지 남·북의 병력은 정전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였고(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9, 364-366), 1958년 1월 1일, 남·북의 외국 군대는 약 5만 명의 주한 미군과 약 29만의 중국인민지원군이 대략 1:4의 비율로 군사력의 균형을 형성하고 있었다.<sup>4)</sup>

그런데 중·북은 1958년 남·북의 이러한 군사력의 균형을 깨고 북한으로부터 중국인민지원군을 완전히 철수시켰다. 1958년 3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3단계에 걸쳐 지원군 사령부를 포함한 중국인민지원군 병력 전체가 최종적으로 철군하였다(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2000, 529). 중국인민지원군이 철군하기 직전인 1958년 1월 1일, 북한 인민군 병력은 약 33만 명이었고 같은 시기 한국군 병력은 약 61만 명이였다(『Current Intelligence Weekly Summary』, 13 February, 1958). 한국군이 북한군 보다 대략 두 배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군사적 열세의 상황에서도 중·북은 북한 군사력의 증추를 담당했던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를 단행하였다. 게다가 당시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배치를 계획하여 남한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려 했고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도 불안한 시기였다.<sup>5)</sup> 어째서 중·북은 1953년 7월 27일부터 1958년 1월 1일까지 일정한 비율로 유지했던 남·북의 군사평형을 무시하면서 중국인민지원군을 철군시켰던 것일까?

이러한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 기존의 학계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중·북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하면서 일정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연구에서는 실제 철군의 배경은 중

3) 1958년 1월 1일, 남한에는 미군 55,496명과 유엔군 5,728명이 주둔하고 있었다(『Current Intelligence Weekly Summary』, 13 February, 1958).

4) 미군 군사전력과 군수장비의 우월함으로 인해 중국인민지원군은 미군 보다 약 4배의 병력을 보유해야만 한반도에서 상대적인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5) 1956년 10월, 미국은 핵무기를 남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55-1957, 322-325), 1958년 핵탄두의 탑재가 가능한 에네스트 존(Honest John)과 280mm포가 남한에 실전 배치되었다(『FRUS 1958-1960, 460-461). 1958년 8월 23일, 중국은 金門島 포격을 실시하여 대만과의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楊奎松 2003, 50).

국의 내부 문제 때문이었다는 시각에서 군대 주둔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중국 국내의 경제발전에 자원을 집중하려 했다는 관점(김용현 2006, 156; 2001, 81), 1958년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완성과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건설 필요성이 맞물려 철군이 결정됐다는 측면(박영실 2010, 199-200), 1958년 북한의 농업 집단화와 사회주의 개조 완료가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의 배경이었다는 것(서동만 2005, 598)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와 1956년 '8월 종파사건'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박종철 2008, 207-213; 장창준 2010, 49-77), 중국의 대내외적 안보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와 연결되어 철군이 결정됐다는 설명(이상숙 2009, 92-96), 김일성(金日成)을 안무(按撫)하고 중·북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 모택동(毛澤東)이 주동적으로 철군을 결정했다는 주장(沈志華 2009, 181-182) 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사료의 한계로 인하여 철군이 실제 결정됐던 정확한 시기를 밝힐 수 없었고, 또한 철군의 원인과 배경을 중·북 관계의 측면에서만 분석했기 때문에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가 미흡하였다. 이에 본고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중국공산당 대외 연락부 자료를 통해 1956년 말 북한이 먼저 철군 요구를 제기하여 이내 중국이 철군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외 정책 문서와 러시아 현대 역사 문서보관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중·북 관계를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검토함으로써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또한 모택동 등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에게만 보고되었던 내부참고 문건을 분석하여 한국전쟁 정전 이후 북한에 주둔했던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실상을 새롭게 밝혀보려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1953~56년 중국의 외교노선과 한국전쟁 이후 대북정책의 특징, 1956년 '8월 종파사건'에 대한 중·소의 공동 간섭이 북한에 끼친 영향, 1956년 11월 소련군에 의한 헝가리 정권의 붕괴가 북한에 주었던 충격 등을 분석하여, 북한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요구했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이었고 중국은 어째서 북한의 철군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중·북은 '이념적 동맹관계', '형제적 혈맹관계', 혹은 양국이 긴밀

히 연결되어 서로의 이해를 같이하는 ‘순치상의(脣齒相依)’적 관계였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문제에 관한 검토는 중·북 관계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중국인민지원군 철군 문제를 통해 중·북 관계가 기존의 통념과는 상반되게 긴장과 갈등 속에서 지속됐고, 또한 중·북이 양국 간의 현안을 처리함에 있어 국익과 정권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II. 한국전쟁 이후 중국의 외교 노선과 대북 정책

1953년 중국은 제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하였다. 1953년 1월 1일,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1953년을 중국이 대규모 건설로 진입하는 ‘첫 번째 해’라고 선포하였고, 경제건설의 공업화가 중국 인민의 최고 이익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sup>6)</sup> 1953년 1월 26일, 주은래(周恩來)는 전국재정회의(全國財政會議)에서 올바른 건설을 위한 시장의 안정을 지적하면서 경제건설과 공업성장에 국가건설의 중점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1953년 2월 4일, 주은래는 정치협상회의 제1회 전국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정치보고를 통해서도 1953년도 건설계획의 완성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는 주요 임무라고 언급하였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11, 1039-1044).

중국은 국내의 대규모 경제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중국 주변 국제정세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09, 545; 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11, 1003).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정전되자 중국은 주변의 국제적 분쟁을 종식시키고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없애기 위한 정책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였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외교방면에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제네바 회의를 통해 아시아의 분쟁지역인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의 긴장을 완

6) 이에 대해서는 “迎接一九五三年的偉大任務”(『人民日報』, 1953年 1月 1日) 참조.

화시키는 것이었다. 둘째, 인도, 미얀마 등과 함께 평화공존 5원칙을 제창하고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주변국과의 국경분쟁 등을 완만하게 해결하는 것이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09, 547).

1954년 1월 25~28일, 미·소·영·프 4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베를린에서 개최되어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 문제를 토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54년 4월 26일~6월 15일, 중국 대표단은 제네바 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였다. 하지만 한반도에 관한 토론은 회의 기간 내내 교착 상태에 있었고, 결국 남·북 분단 상황에 관한 실효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제네바 회의는 인도차이나의 평화를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1954년 5월 8일, 제네바 회의는 인도차이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6월 19일,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협정에 합의하였다. 1954년 7월 20일, 베트남·중국·소련 측과 프랑스는 북위 17도 선을 경계로 베트남을 남·북으로 분할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분쟁을 종식시켰다. 1954년 7월 21일, 회의 참가국들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평화 회복에 관한 ‘제네바회의 선언’을 채택하였고, 중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11, 1003-1026).

1953년 12월 31일, 주은래는 중국의 서장(西藏) 지역과 인도 사이의 국경문제에 관한 중·인 회담에서 중국외교의 기본방침인 평화공존 5원칙을 최초로 언급하였다.<sup>7)</sup> 1954년 6월 25~28일, 주은래는 인도를 공식 방문하여 네루(Jawaharlal Nehru) 총리와 6차례 회담을 갖고 평화공존 5원칙을 재차 확인하였다. 중·인 회담에서 중국 측은 중국의 동남아시아 정책의 중점은 평화공존이며, 중국은 인도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일관된 평화공존 노선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1954년 6월 28일, 주은래는 미얀마의 양곤을 방문하여 우누(U Nu) 총리와도 회견하였다. 당시 미얀마는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7) 중국은 “和平共處五原則”(1953年 12月 31日)에서 영토·주권의 존중, 상호 불침략,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의 5원칙을 중·인 양국관계를 처리하는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1984, 118).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중국 측은 회담을 통해 미얀마의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면서 중국의 평화공존 5원칙과 평화정책을 설명하였다. 중국은 미얀마 영토의 완전(完整)을 존중하며 미얀마 국내에 근거지를 두었던 국민당 잔여세력인 이미(李彌) 장군 부대의 활동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전쟁 정전 이후 국제환경의 안정을 위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은 1955년 4월 18~24일 개최됐던 반동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중국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29개국이 참가한 반동회의에서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이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공존을 역설하였다. 중국을 포함한 반동회의 참가국들은 세계평화와 상호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각국의 평화공존과 우호협력에 관한 '10개 원칙'을 선언하였다(裴堅章 1994, 235-237). 또한 중국 대표단은 반동회의 폐막 전날인 4월 23일 인도네시아 총리가 주최한 오찬에 참석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만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해 미국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였다.<sup>8)</sup> 중국은 반동회의 기간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한 중국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국제사회에 성공적으로 각인시켰으며, 반동회의 이후에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및 교류를 강화시키며 중국 주변의 국제정세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09, 594-599).

한편,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정전된 이후 중국은 북한의 안정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 방지를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체제건설에 돌입했던 중국은 동북지역과 인접한 북한에서 또다시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경계하였다. 중국은 전후 북한의 안정을 위해 대량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한반도의 전쟁 재발 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북한의 군사력 억제와 정치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8) “緬, 錫, 中, 印等八國代表團團長討論緩和遠東緊張局勢問題 周恩來總理在會上發表聲明”(『人民日報』, 1955年 4月 24日) 참조. 미국은 중국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여 1955년 7월 13일 영국 정부를 통해 제네바에서 양국 대사급회담의 개최를 중국 측에 제안했고, 1955년 8월 1일부터 중·미 대사급 회담이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09, 599-600).

한국전쟁은 북한의 주요 공업시설과 산업기반을 철저히 파괴시켰고, 이로 인해 북한 경제는 심각한 곤란에 처해 있었다.<sup>9)</sup> 1953년 8월 5일,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공장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복구 발전시키는 전후 경제계획을 수립하였다(김일성 1956, 5). 북한은 전후 경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원조를 지원받았다(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1988, 619-629). 특히 중국은 국내의 경제발전과 체제건설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전후 북한 경제의 신속한 안정이 필요했고, 1953년 11월 14일~22일 북경(北京)에서 북한 대표단과 협상을 진행하여 북한의 전후 재건을 위한 대량의 경제 원조를 결정하였다. 중국은 회담을 통해 1950년 6월 25일~1953년 12월 31일 기간 모든 대북 경제원조의 물자와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동시에 1954년~1957년간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해 인민폐 8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sup>10)</sup> 중국이 북한의 경제·사회적 안정을 추구했던 노력은 1954년 발생했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에 대한 식량 지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북한은 1954년 기후조건 악화로 인해 곡물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다.<sup>11)</sup> 게다가 강압적인 쌀 수확 매입, 급격한 협동농장화 추진, 사적인 곡물거래 금지 등 일련의 정책실패는 1955년 상반기 북한의 식량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sup>12)</sup> 북한은 악화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중국은 1955년 4~5월 13만 톤의 농산물을 북한에 지원하였다(Szalonta 2003

9) 박창옥의 “1954~195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은 약 4,2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고, 약 8,700개의 공장, 약 60만 호의 주택, 약 5,000개의 학교, 약 1,000개의 병원, 263개의 극장과 영화관이 파괴되었다. 1953년 국영기업과 협동기업의 공업 총생산액은 전쟁 전에 비하여 40% 이상 줄었고, 화물과 여객 수송은 각각 30%, 78% 감소되었다(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1988, 642).

10)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談判公報”(『人民日報』, 1953年 11月 24日) 참조.

11) 특히 咸鏡北道 지역의 농작물 냉해 피해가 심각했고, 1955년 북한은 피해가 심했던 咸鏡南道 및 江原道 농민들에게 45,000톤에 해당하는 현물세의 납부와 대여 곡식의 반환을 면제시켰다(『조선중앙년감』 1956, 128).

12) 이에 대해서는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13 April, 1955; 10 May, 1955)”(*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CWIHP) Bulletin*, Issue 14/15, 107-108) 참조.

-2004, 90). 북한의 경제 재건과 식량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일방적인 대북 경제 지원은 전후 시기 중·북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이었고, 중국은 인접한 북한이 경제·사회적인 혼란에 빠져 중국 국내의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피하려고 했다.

군사적 방면에서 중국은 정전 이후 한반도의 전쟁 재발 방지와 평화 상태 유지를 일관되게 추구하였다. 정전협정 제60항은 협정이 체결된 후 3개월 안에 정치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sup>13)</sup> 이에 근거하여 1953년 8월 15일,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정치회담 개최에 대한 중국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중국은 정치회담에 관하여 쌍방의 담판 형식이 아닌 남·북을 포함한 중·소·미·영·프 등 5개국과 폴란드·인도·스웨덴·미얀마 등 4개 중립국이 참가하는 원탁회의 방식을 주장하였다. 1953년 10월 26일, 중·북과 미국은 판문점에서 정치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회담을 시작했지만 결국 12월 12일 협상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결렬되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09, 547-550). 이후 1954년 제네바 회의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남·북 통일과 외국군대 철수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고착되자 중국은 북한의 병력 증강을 억제시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정전 당시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약 25만의 인민군 병력은 1955년 상반기 약 42만 명으로 증가한 상태였고(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538), 1956년 5월 31일, 북한은 성명을 통해 1956년 8월 31일까지 인민군 8만 명의 축소를 발표하여,<sup>14)</sup> 1958년 1월 1일 현재 약 33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Current Intelligence Weekly Summary』, 13 February, 1958). 정전 이후 중국은 북한에게 군사력 확장 반대와 병력 감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북한의 안보가 중국인민지원군에 의해 유지된다고 판단한 중국은 북한 측에 약 42만의 인민군을 약 10만의 정예군 규모로 감축할 것을 충고했고, 중국인민지원군이 38선을 방어하는 기회를 활용한다면 북한 인민군의 3분의 2를 줄일

13) 이 내용은 “한국후전협정”(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9, 380)을 참고하였음.

14) 이에 대한 내용은 “조선인민군 병력 축소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성명”(『로동신문』, 1956년 6월 1일) 참조.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공군을 강화시키고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창설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으며, 북한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은 전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과도하게 양성하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sup>15)</sup>

이처럼 중국이 북한의 병력 증강을 억제시키고자 했던 까닭은 북한이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동시에 북한의 군사력 확장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군사력 강화를 부추기는 빌미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본격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돌입했던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주한 미군의 군사력이 확대되어 동아시아 국제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1953년 이래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했던 중국의 외교노선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 Ⅲ. 1956년 ‘8월 종파사건’과 중·소의 공동 간섭

‘8월 종파사건’은 1956년 8월 30~31일 평양(平壤)에서 열렸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8월 전원회의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의 반(反)김일성 세력은 8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했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대다수 중앙위원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였다. 오히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윤공흠(尹公欽), 서휘(徐輝), 리필규(李弼奎), 김강(金剛) 등이 전원회의 당일 중국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들의 망명사건은 중·소가 북한 내정에 공동으로 간섭하는 구실이 되었다. 북한은 ‘8월 종

15) “毛澤東第二次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1956年 9月 23日)을 참조. 모택동이 북한의 지나친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던 것도(“毛澤東第二次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1956年 9月 23日)) 중공업 분야가 군사무기의 생산과 직결된 산업이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깊다. 1958년 여름, 김일성의 현지지도에 동행했던 黃長燁의 회고에 따르면 북한이 추진했던 중공업 정책에 의해 이미 平安北道·慈江道·兩江道 일대의 지하에 군수공장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었다고 한다(황장엽 2006, 144).

파사건'에 대한 중·소의 공동 간섭을 겪으며 중·소가 북한 정권의 안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인식은 1956년 말 북한이 중국에게 중국인민지원군 철수를 요구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8월 종파사건'은 복합적인 역사적 원인과 배경 위에서 발생했지만(백학순 2010, 188-315),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Nikita Sergeevich Khrushchyov)에 의한 스탈린(Joseph Stalin) 개인숭배 비판과<sup>16)</sup> 1956년 6~7월 김일성의 동유럽 순방 기간 모스크바(Moscow)의 북·소 회담에서 소공(蘇共) 지도부가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했다는 사실이 김일성 개인숭배와 독재에 불만을 품고 있던 북한의 반김일성 세력을 고무시켰다는 것과 관련이 깊다.<sup>17)</sup> 특히, 김일성의 권력 독점화가 1956년 4월 23~29일 개최됐던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를 계기로 더욱 강화되자(이종석 2003, 274-275), 조선로동당 8월 전원회의를 앞두고 반김일성 세력의 정치적 불만은 한층 고조되었다. 1956년 6월 1일~7월 19일, 김일성은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1957년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위한 원조를 얻기 위해 소련을 비롯한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을 방문하였다.<sup>18)</sup> 순방 기간 김일성이 모스크바에 들렀을 때 소련은 북한의 김일성 개인숭배, 당내 민주주의 부재, 집단지도체제 미흡 등에 관해 충고와 조언을 하였다.<sup>19)</sup> 귀국 후 김일성은 이러한 사실을 북한 국내에 알리지 않았지만, 반김일성 세력은 평양의 소련대사관을 통해 김일성이 모스크바에서 소련

16) 이에 대해서는 “關於個人崇拜及其後果(1956年2月25日)”([俄]尼基塔·謝·赫魯曉夫 2005, 368-425),

“赫魯曉夫的秘密報告”([意]維·維達利 2006, 225-296)를 참조.

17) 이에 대해서는 『毛澤東第二次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1956年 9月 23日) 참조.

18) 북한 정부대표단의 자세한 순방 일정은 『국제주의적 친선』(1957)을 참고.

19) “毛澤東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1956年 9月 18日), “Memorandum of a Conversation with DPRK Ambassador to the USSR Li Sangjo(10 September, 1956)”(*CWIHP Bulletin*, Issue 16, 492)를 참조. 한편, 1955년 4월 7일, 평양의 소련대사관은 김일성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함에 따른 정책 혼란의 심각성을 지적했었고(“북한의 정세와 북한 동지와의 회담에서 주의해야하는 기본 문제에 관하여(1955년 4월 7일)”,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РГАНИ) (러시아 현대 역사 문서보관소), ф. 5, оп. 28, д. 314, 33-36), 1955년 5월,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도 소련지도부는 북한이 개인숭배 현상 완화와 당내 집단지도체제를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한 적이 있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개인숭배”에 관한 보고(1956년 4월 5일)”(РГАНИ, ф. 5, оп. 28, д. 410, 57-67) 참조.

지도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북한의 정치 상황을 바꿀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sup>20)</sup>

1956년 8월 30~31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8월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본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방문 결과에 대한 정부대표단의 보고와 인민보건사업의 개선·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주된 의제였다.<sup>21)</sup> 그런데 첫날 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섰던 상업상(商業相) 윤공흠의 발언이 ‘8월 종파사건’ 발생의 발단이 되었다. 그는 조선로동당 지도부가 개인송배에 관한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당내 민주의 부재로 인해 간부 인사가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불만을 표출하였다. 김일성은 즉시 윤공흠의 발언을 중단시켰고, 최창익(崔昌益)이 윤공흠을 변호하려 했으나 발언은 허락되지 않았다. 8월 30일의 오후 회의에서 최창익과 박창옥(朴昌玉) 등이 발언했으나 중앙위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토론에 나섰던 대부분의 발언자들은 윤공흠과 리필규 등의 반김일성계 인사들을 강하게 비난하였다.<sup>22)</sup> 결국, 8월 전원회의는 반김일성 세력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여 최창익, 박창옥, 윤공흠, 서희, 리필규의 당과 정부에서의 직위를 박탈했고, 윤공흠, 서희, 리필규를 당에서 제명시켰다.<sup>23)</sup> 8월 전원회의 당일 회의장을 빠져나왔던 서희, 윤공흠, 리필규, 김강 등 4명은 이후 의주(義州)를 통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망명하였다(안성규 1994, 560-561). 북한은 망명사건 발생 직후인 1956년 9월 3일 중국 측에 망명자들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망명자들이 단순한 월경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송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sup>24)</sup> 중국이 망명자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송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중·북 관계의 긴장이 고조 되었다.<sup>25)</sup>

20) 이에 대해서는 “毛澤東第二次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1956年 9月 23日) 참조.

21) 이에 대해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로동신문』, 1956년 9월 5일) 참조.

22) 이에 대해서는 “Memorandum of Conversation with Bak Uiwan, 6 September 1956”(CWIHP Bulletin, Issue 16, 489-491) 참조.

23) 이에 대해서는 “최창익, 윤공흠, 서희, 리필규, 박창옥 등 동무들의 종파적 음모 행위에 대하여(전원회의 결정 1956년 8월 30~31일)”(『결정집 1956년도 (전원회의, 상무, 정치, 조직위원회)』 1956, 16) 참조.

24) 이에 대해서는 “Memorandum of Conversation with Chinese Ambassador to the DPRK, Qiao Xiaoguang, 4 September 1956”(CWIHP Bulletin, Issue 16, 485) 참조.

한편, 1956년 9월 15일~27일 중국공산당 제8차 대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1956년 9월 18일, 중국 지도부는 중공 8차 대회에 참석했던 소련공산당 대표단과 회동하여 '8월 종파사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소는 북한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고, '8월 종파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처리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모택동은 '8월 종파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그들의 당적과 직무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소련 대표단의 미코얀(Anastas Ivanovich Mikoyan)은 중·소 대표단이 평양에 가서 중·소·북 모두가 참석하는 조선로동당 정치국회의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중·소는 평양 주재 각국 대사까지 포함한 8명의 공동 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였다.<sup>25)</sup>

1956년 9월 18일, 중공 지도부는 소련 대표단과의 회동을 마친 후 조선로동당 대표단과도 회담을 진행하였다. 모택동과 팡덕회(彭德懷) 등은 '8월 종파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징계 결정과 북한의 간부정책을 비판하였다. 중국 측은 '8월 종파사건' 관련자들인 최창익, 박창욱, 윤공흠, 서희, 리필규 등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제명과 직위 해제 결정은 부당하며, 중국으로 망명한 인사들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혁명에 참가했던 박일우(朴一禹), 방호산(方虎山) 등의 당적을 박탈하고 심지어 반혁명의 죄명으로 박일우를 체포한 사실은 엄중한 착오라고 지적하였다. 모택동은 만약 북한이 박일우, 방호산 등 연안계 인사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중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박헌영(朴憲永)을 사형시킨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였다. 중국 측은 회담을 통해 정치적 반대의견을 가진

25) 이에 대해서는 "CPSU Central Committee Report on the Situation in the KWP and the DPRK, 9 January 1957"(CWHP Bulletin, Issue 16, 527) 참조.

26) "毛澤東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1956年 9月 18日). 그런데 '8월 종파사건'에 대한 중·소의 공동간섭은 북한을 자극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문제와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것은 북한이 중·소의 공동 간섭을 김일성 정권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모택동은 중·소의 공동 개입을 내정 간섭으로 인식한 김일성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요구할지 모른다고 우려("毛澤東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1956年 9月 18日))하였다. 결국, 이러한 모택동의 염려는 1956년 말 북한이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철수를 요구함으로써 현실화 되었다.

인물들과의 대화, 체포한 인사들의 석방과 복권, 중국으로 망명한 4명에 대한 귀국과 사면 등을 북한 측에 제시하였다.<sup>27)</sup>

1956년 9월 19일, 중·소 공동 대표단은 북한의 최용건(崔庸健)을 대동하고 북경을 출발하여 평양에 도착하였다(이중석 2010, 403). 중·소는 도착 직후 김일성과 별도로 2차례 회동하여 중·소의 '8월 종파사건' 개입 의도를 설명하였다.<sup>28)</sup> 1956년 9월 23일, 조선로동당은 중·소 공동 대표단의 팽덕회와 미코얀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창익, 윤공흠, 서휘, 리필규, 박창옥 등의 문제를 다시 심의하였다.<sup>29)</sup> 조선로동당 9월 전원회의는 8월 전원회의가 '8월 종파사건' 관련자들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지 못했고 또한 그들에 대한 처리 방법이 간단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최창익, 박창옥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의 복권과 윤공흠, 서휘, 리필규의 당적 회복을 결정하였다.<sup>30)</sup> 1956년 9월 23일, 중·소 공동 대표단은 북경으로 돌아와 모택동 등 중국 지도부와 회동하였고, 중·소는 '8월 종파사건'에 대한 개입은 계획했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였다.<sup>31)</sup>

그러나 중·소의 '8월 종파사건'에 대한 간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북한은 9월 전원회의에서 내렸던 결정을 실행하지 않았고, 최창익, 박창옥에 대한 실질적 복권과 중국으로 망명했던 인사들의 귀국도 실현되지 않았다. 북한은 박일우, 방호산 등 연안계 인사들을 중국으로 보내도 좋다는 중국의 요구도 무시하였다. 애초에 김일성과 미코얀, 팽덕회는 9월 전원회의 결정문 전문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합의했지만,<sup>32)</sup> 9월 전원회의 결정에 관한 요약문이 신문에 간략하게 보도되었을 뿐이었다.<sup>33)</sup>

27) 이에 대해서는 “毛澤東接見朝鮮代表團談話紀要”(1956年 9月 18日) 참조.

28) 이에 대해서는 “毛澤東第二次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1956年 9月 23日) 참조.

29) 이에 대해서는 “북한 주재 소련대사 푸자노프의 일기(1957년 7월 5일)”(Внешне 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рхив(АВГРФ)(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외정책 문서), ф. 0102, оп. 13, д.5, 131-145) 참조.

30) 이에 대해서는 “최창익, 윤공흠, 서휘, 리필규, 박창옥 등무들에 대한 규율 문제를 개정할 데 관하여(전원회의 결정 1956년 9월 23일)”(『결정집 1956년도 (전원회의, 정치, 상무, 조직위원회)』 1956, 24) 참조.

31) 이에 대해서는 “毛澤東第二次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1956年 9月 23日) 참조.

32) 이에 대해서는 “CPSU Central Committee Report on the Situation in the KWP and the DPRK, 9 January 1957”(CWIHP Bulletin, Issue 16, 521-522) 참조.

오히려 9월 전원회의 이후 김일성은 대대적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강화시켰다(서동만 2005, 567-589). ‘8월 종파사건’으로 인한 중·소의 내정간섭을 계기로 북한의 중·소에 대한 불신은 확대되었고, 중·북 관계는 한층 경직되었다. 특히, 중·북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만이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북한이 1956년 말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를 중국에게 요구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 IV. 1956년 10~11월 폴란드·헝가리 사태와 중국의 외교활동

1953년 3월 5일, 스탈린 사망 후 집단지도체제를 강화시킨 소련지도부가 실시했던 탈스탈린 정책은 폴란드와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유화 운동을 촉진시켰다. 1956년 10~11월, 폴란드와 헝가리의 자유화 요구는 최고조에 달했고, 소련과 폴란드·헝가리 사이의 긴장이 격화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런데 소련과 갈등을 겪으며 전개됐던 폴란드와 헝가리의 자유화 운동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해결되었다. 소련은 협상을 통해 폴란드와 정치적 타협을 이루었던 반면 헝가리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진압을 선택하였다. 1956년 11월 소련 군대가 헝가리 정권을 붕괴시켰던 사실은 북한의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확대시킨 계기가 되었다.

1956년 6월 28~29일, 폴란드의 포즈난(Poznan)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촉발된 포즈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군중 시위대는 정부의 보안 기관을 공격하고 정치범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공산당 독재의 철폐, 신정부 수립을 위한 자유선거의 실시, 폴란드에 주둔한 소련 군대의 철수 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오히프(Edward Ochab)가 이끄는 폴란드 지도부는 폴란드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

33) 이에 대해서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서”(『로동신문』, 1956년 9월 29일) 참조.

압했고, 결국 포즈난의 유혈사태는 폴란드 인민의 강한 불만과 저항을 만연시킨 계기가 되었다(Kramer 1998, 168).

1956년 10월 1~2일, 폴란드 통일노동자당 정치국 회의는 1943~48년 폴란드 노동자당 지도자였던 고물카(Wladyslaw Gomulka)의 정치국 회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1956년 10월 12일,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고물카는 폴란드 보안기관의 소련인 고문(顧問) 문제와 소련이 폴란드 군대를 통제하는 비정상적 상황의 해결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폴란드에서 반소(反蘇) 정서의 표면화 방지를 위해 소련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필요성도 강조하였다(沈志華 2002, 22-24).<sup>34)</sup> 1956년 10월 18일, 소련공산당 지도부는 폴란드 통일노동자당의 반소 조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소련공산당 대표단의 폴란드 파견을 결정하였다(沈志華 2002, 26).<sup>35)</sup> 1956년 10월 19일, 폴란드 통일노동자당은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고물카를 제1서기로 선출했고, 소련 국적의 폴란드 국방부장 로코소우스키(Konstantin Rokossowski)를 정치국 위원에서 제명하였다. 흐루시초프는 폴란드에 주둔한 소련 군대를 바르샤바(Warsaw)로 진군시켜 폴란드 지도부를 압박하는 한편, 10월 19일 소련공산당 대표단을 직접 인솔하고 바르샤바에 도착하여 폴란드 지도부와 회담을 진행하였다. 흐루시초프는 폴란드 당내의 반소 현상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소련-폴란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연대의 진일보한 강화를 강요하였다. 반면, 고물카는 폴란드의 소련 고문들과 로코소우스키를 포함한 소련 장군들을 폴란드에서 철수시킬 것을 주장했고, 동시에 폴란드는 바르샤바 조약(Warsaw Pact)을 탈퇴하지 않을 것이며 소련과의 우호적인 협력을 원한다고 강조하였다(Kramer 1998, 169-171). 결국 폴란드는 사회주의 진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소련의 최소한의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은 폴란드 국내 문제의 처리를 폴란드 지도부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였다.

한편, 1956년 10월 19일, 소련은 중국 주재 소련대사 유딘(Pavel Yudin)을 통해 소련대표단의 폴란드 파견 사실을 중국 측에 통보했고, 10월 21

34) 이에 대해서는 “哥穆爾卡在波蘭統一工人黨政治局會議上的講話摘要”(1956年 10月 12日) 참조.

35) 이에 대해서는 “蘇共中央主席團關於派遣蘇共代表團赴波蘭的決定”(1956年 10月 18日) 참조.

일에는 폴란드 문제 협의를 위한 중공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을 요청하였다. 1956년 10월 23일, 유소기(劉少奇), 등소평(鄧小平) 등으로 구성된 중공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도착했고, 소련 지도부는 고물카가 이끄는 폴란드의 신지도부를 인정했으며 바르샤바로 진격하려 했던 소련군대의 철수를 결정했다는 것 등을 중공 대표단에게 전달하였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09, 601-603). 그런데 이 무렵 헝가리의 자유화 운동이 고조되었고, 중·소는 폴란드 선후(善後) 문제와 함께 헝가리 사태 처리 방안을 논의해야만 했다.

1956년 10월 23일, 헝가리의 정치개혁과 자유화를 요구하는 부다페스트(Budapest)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확대되었고, 헝가리 보안대가 라디오 방송국을 점거하려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사건으로 인해 헝가리 정세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헝가리의 스탈린주의자 라코시(Matyas Rakosi)의 후임이었던 거로(Erno Gero)는 헝가리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태를 해결할 능력도 부족하였다. 시위대는 개혁 성향의 정치인 나지(Imre Nagy)가 헝가리 국정을 이끌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결국 거로는 국내의 상황이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어가자 소련의 군사 개입을 요청하였다(Kramer 1998, 180-183). 이에 1956년 10월 23일, 소련공산당은 정치국회의를 개최하여 헝가리 사태 처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코얀은 나지를 통해 헝가리 정세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제기하며 군사개입에 신중할 것을 주장했지만 흐루시초프를 비롯한 다른 정치국원들의 찬성으로 소련군의 파병은 결정되었다.<sup>36)</sup> 1956년 10월 24일 새벽, 헝가리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 2개 사단이 부다페스트로 진격했고, 그들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이동한 소련군과 합류하여 시내의 저항세력들을 진압하였다(Kramer 1998, 184-185).

1956년 10월 24일, 유소기, 등소평 등 중공 대표단은 소련공산당의 요청을 받고 헝가리 사태 논의를 위한 소련공산당 정치국회의에 참석하였다. 흐루시초프는 중공대표단에게 소련군이 부다페스트로 진입하여 기본적인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유소기는 중공대표단을 대

36) 이에 대해서는 “The ‘Malin Notes’ on the Crises in Hungary and Poland, 1956”(CWHP Bulletin, Issue 14/15, 389) 참조.

표한 발언에서 소련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였고, 스탈린 시기 소련의 대국주의(大國主義)와 대민족주의(大民族主義)가 폴란드·헝가리 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국가와 국가, 당과 당의 관계에서 독립자주와 평등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하였다. 1956년 10월 26일, 중공대표단은 소련공산당 정치국회의에 다시 참석하여 폴란드와 헝가리 상황을 파악하였고, 10월 29일에는 중공대표단이 묵고 있던 별장에서 흐루시초프, 몰로토프(Vyacheslav Molotov), 불가닌(Nikolai Bulganin) 등과 또다시 회동하였다. 이 자리에서 중·소는 폴란드와 헝가리로부터 소련군대를 철수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유소기는 소련군의 철수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회담 도중 유소기는 북경에서 걸려온 모택동의 전화를 받고 철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다. 모택동과 중공 중앙의 의견은 소련이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정치·경제적 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주둔한 소련군도 마땅히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소 양측은 새벽까지 회담을 이어갔고, 소련지도부는 중공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정치·경제·군사 방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바르샤바 조약국 간의 회담을 통해 소련군 철수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는 이러한 합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대내외에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師哲 1997, 13-16; 駱亦粟 1997, 41-42; 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11, 738-739).

1956년 10월 30일, 소련공산당 정치국회의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치국회의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도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위에서 건립해야 한다는 중국공산당의 의견을 검토하였고,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로부터 소련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결의하였다.<sup>37)</sup> 1956년 10월 30일, 소련은 사회주의 각국들과의 상호 친선과 협조를 강화시키는 것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고, 11월 1일 중공은 소련의 선언을 『인민일보』에 전재했으며,<sup>38)</sup> 11월 2일에는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성명을

37) 이에 대해서는 “The ‘Malin Notes’ on the Crises in Hungary and Poland, 1956”(CWIHP Bulletin, Issue 14/15, 392-393) 참조.

38) 이에 대해서는 “蘇聯政府關於發展和進一步加強蘇聯同其他社會主義國家的友誼和合作的基礎的宣言”(『人民日報』, 1956年 11月 1日) 참조.

발표하여 소련 정부의 선언에 화답하였다.<sup>39)</sup> 소련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을 어겼다는 반성문적 성격의 선언을 북한도 1956년 11월 1일 『로동신문』 1면에 전재했고,<sup>40)</sup> 11월 3일 『로동신문』은 소련의 선언에 대한 11월 2일자 중국 정부의 성명을 다시 실었다.<sup>41)</sup> 소련의 선언에는 정국 혼란이 악화되는 헝가리를 향해 보내는 협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중공은 선언문이 작성되고 공표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1956년 10월 31일, 소련의 헝가리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헝가리의 혼란한 정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고 있었다. 소련은 10월 30일의 방침을 뒤집고 헝가리와 부다페스트에서 소련군을 철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sup>42)</sup> 헝가리 정세의 혼란과 더불어 1956년 10월 31일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Suez) 운하의 이권을 둘러싸고 이집트를 공격했던 사실이 소련의 헝가리에 대한 군사개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Kramer 1998, 191). 흐루시초프는 만약 소련군이 헝가리를 떠난다면 서방국가들은 소련을 나약하게 여길 것이며 이집트에 덧붙여 헝가리를 서방세력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sup>43)</sup> 반면, 1956년 10월 30일 저녁 중공대표단은 소련지도부와 의 긴급회동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헝가리에서 소련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반대했지만(師哲 1997, 16-17), 이것이 10월 31일 소련공산당 지도부의 소련군 잔류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불분명하다.<sup>44)</sup> 중국의 대표적인 냉전사 연구자인 심지화(沈志華)는 중국이 헝가리에 대한 소련의 군사개입 결정에 있

39) 이에 대해서는 “中華人民共和國政府關於蘇聯政府一九五六年十月三十日宣言的聲明”(『人民日報』, 1956年 11월 2日) 참조.

40) 이에 대해서는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의 발전 및 그 가일층의 강화의 기본에 관한 쏘련 정부의 선언”(『로동신문』, 1956년 11월 1일) 참조.

41) 이에 대해서는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의 발전 및 그 가일층의 강화의 기본에 관한 쏘련 정부의 선언과 관련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성명”(『로동신문』, 1956년 11월 3일) 참조.

42) 이에 대해서는 “The ‘Malin Notes’ on the Crises in Hungary and Poland, 1956”(CWHP *Bulletin*, Issue 14/15, 393-394) 참조.

43) 이에 대해서는 “The ‘Malin Notes’ on the Crises in Hungary and Poland, 1956”(CWHP *Bulletin*, Issue 14/15, 393) 참조.

44) 이에 대해서는 “The ‘Malin Notes’ on the Crises in Hungary and Poland, 1956”(CWHP *Bulletin*, Issue 14/15, 405-94면 미주) 참조.

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하지만(沈志華 2005, 136-143), 중국 측 자료에만 근거한 주장이라는 한계가 있다.<sup>45)</sup> 증강된 소련군이 헝가리로 진격할 것이란 정보를 접수한 나지는 정부는 1956년 11월 1일 헝가리의 중립을 선포하였고, 유엔(UN)에 서신을 보내 헝가리의 중립에 대한 문제를 차기 유엔 총회에서 즉각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46)</sup> 하지만 1956년 11월 4일, 소련군은 부다페스트로 진격했고, 헝가리의 나지 정권은 소련의 무력 앞에 붕괴되었다(Kramer 1998, 208).

## V. 북한의 중국인민지원군 철군 요구와 중국의 동의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을 검토할 때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언제, 누가 철군 요구를 제기했는가의 문제이다.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철수 요구는 1956년 말 북한이 먼저 제기하였다. 1956년 11월 30일, 모택동은 중국 주재 소련대사 유딘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일성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sup>47)</sup> 1957년 1월 9일, 주은래는 모스크바에서 소련지도부에게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에 대한 중국의 결정을 전달하고 소련의 동의를 얻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97, 6). 앞서 살펴봤듯이, 1956년 9월 18일, 모택동은 ‘8월 종파사건’ 문제를 논의했던 중·소 회담에서 만약 중·소가 북한 내정에 간섭한다면 김일성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철

45) 예컨대 沈志華 교수는 대량의 중국과 러시아 자료를 1차 사료로 활용했지만 소련의 헝가리에 대한 군사개입 결정에 관한 소련공산당 정치국회의 자료(“The ‘Malin Notes’ on the Crises in Hungary and Poland, 1956”(CWHP Bulletin, Issue 14/15, 385-410)를 검토하지 않았다. 참고로, 沈志華도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沈志華 2005, 126~127; 130) 폴란드·헝가리 사태 기간 중공의 정치국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吳冷西의 기록에는 날짜와 내용 등에서 많은 오류(吳冷西 1999, 34-44, 46-47, 57-58; 吳冷西 1995, 10-13)가 존재한다.

46) 이에 대해서는 “(A/3251) Hungary: request for the inclusion of an additional item in the agenda of the General Assembly, 1 November 1956”(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1956, 1) 참조.

47) 이에 대해서는 “毛澤東接見尤金談話記錄”(1956年 11月 30日) 참조.

군을 요구할지 모른다고 우려하였다.<sup>48)</sup> 따라서 북한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중국 측에 요구했던 시기는 1956년 9월 18일~11월 30일 사이였으며, 중국이 북한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던 것은 1956년 11월 30일~1957년 1월 9일의 기간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를 요구했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까?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에서 최종적으로 철군했지만 중국인민지원군의 완전 철군이 결정됐던 때는 1956년 말이었기 때문에 철군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56년 말 이전의 역사적 상황을 검토해야만 한다.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多事之秋]’였다는 모택동의 표현처럼(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09, 601), 1956년 하반기 북한, 폴란드, 헝가리 등을 포함한 전체 사회주의 진영에는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었다. 그 중 북한의 중국인민지원군 철군 요구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에 대한 중·소의 공동 간섭과 1956년 11월 소련의 무력 침공에 의한 헝가리 나지 정권의 붕괴가 북한에 끼친 충격이었다.

1956년 9월 19~23일, 중·소는 ‘8월 종파사건’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였다.<sup>49)</sup> 중·소 공동대표단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우호적인 권고’를 하였지만 중·소의 간섭은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고, 북한에서는 반김일성 인사들에 대한 당적(黨籍)의 제명과 체포가 계속되었다. 1956년 8월 30일, 북한의 조선로동당 제8차 전원회의 당시 4명의 북한 인사가 중국으로 망명했고, 9월 19~23일, 중·소 공동대표단이 ‘8월 종파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에 개입한 이후에도 반김일성 인사들의 중국 망명은 계속되었다.<sup>50)</sup> 중·소의 북한 간섭은 중·북 관계를 긴장 상태에 놓이게 했고 김일성의 중국에 대한 불만을 강화시켰다. 중·소로부터 내정간섭을 당했던 김일성은 중국의 군대인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48) 이에 대해서는 “毛澤東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1956年 9月 18日) 참조.

49) 이에 대해서는 “毛澤東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1956年 9月 18日), “毛澤東接見朝鮮代表團談話紀要”(1956年 9月 18日) 참조.

50) 1956년 11월 30일 현재, 중국으로 망명한 북한 인사는 총 15명이었다(“毛澤東接見尤金談話記錄”(1956年 11月 30日)).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의 표면적인 우호관계와는 달리 한국전쟁이 정전된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1954년~1956년 8월,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정부 인사와 주민들을 불법 구금하고 모욕한 사건이 총 355건 발생하였다. 1955년 10월 21일, 중국인민지원군 부대 주변에서 사냥을 하던 북한 외무상 남일(南日) 일행이 중국인민지원군 소대장에 의해 2시간 동안 억류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조선로동당 고위 간부 박정애(朴正愛)와 북한 내무상 방학세(方學世) 등도 중국인민지원군에 의해 억류된 적이 있었다.<sup>51)</sup>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1954년~1956년 8월까지 중국인민지원군의 차량, 총기, 강간,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한 북한 주민 사상자는 417명이었고, 1954~55년에만 중국인민지원군에 의한 북한 부녀자 강간 사건이 68차례 발생하였다. 그 밖에 중국인민지원군에 의한 수목(樹木)의 남벌(濫伐), 중국인 사병의 밀수행위, 경작지와 농작물 및 주민 묘지의 훼손 등은 북한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sup>52)</sup> 많은 북한인들이 중국인민지원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했으며 이는 북한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또한 일부 북한의 지도자들도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sup>53)</sup> 이렇듯 한국전쟁 정전 후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북한 정부와 주민의 불만이 만연했던 상황에서 ‘8월 종파사건’으로 인해 중·소의 내정간섭까지 겪었던 김일성은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sup>54)</sup>

한편, 1956년 11월, 헝가리의 나지 정권이 소련군에 의해 무너졌던 사건은 김일성이 중국 측에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을 요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소련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붕괴시켰다는

51) 이에 대해서는 “停戰以來志願軍與朝鮮黨政軍民關係中的若干問題”(新華社 1956, 158) 참조.

52) 이에 대해서는 “停戰以來志願軍與朝鮮黨政軍民關係中的若干問題”(新華社 1956, 160~162), “志願軍與朝鮮人民關係中存在的一些問題”(新華社 1957, 427~429) 참조.

53) 이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의 1956년 업무보고(1957년 4월 18일)”(ABIPΦ, Φ.5, оп.28, п.103, 409, 139~143) 참조.

54) 김일성이 유엔의 도움을 구하면서 북한의 내정에 간섭했던 중국의 대국주의를 비난하고 한반도에서 미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동시 철군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모택동의 언급(“毛澤東接見尤金談話記錄”(1956년 11월 30일))은 중·소 공동간섭이 북한에 끼친 충격을 잘 보여준다.

사실은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김일성이 헝가리 사태에서 받았던 충격은 북한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폴란드나 헝가리 등과 달리 김일성이 강고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만약 북한에서 정치적 격변이나 사회동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중국인민지원군을 동원하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 더욱이 1956년 9월 북한에 간섭했던 미코얀이 1956년 10월 헝가리 사태에도 개입하였고,<sup>55)</sup> 그 후 소련군에 의한 군사진압이 실시됐다는 사실은 김일성을 더욱 긴장시켰다. 1956년 11월 헝가리 나지 정권이 소련군에 의해 붕괴되자 김일성의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불만’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8월 종파사건’에 대한 중·소의 간섭을 겪으며 김일성이 절감했던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의 필요성은 중국 측에 대한 실질적인 철군요구로 나타났다. 이런 각도에서 북한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최종적인 철군을 요구한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정한다면, 소련군이 헝가리에 전면적인 군사개입을 실시했던 1956년 11월 4일에서 김일성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요구한다고 모택동이 언급했던<sup>56)</sup> 1956년 11월 30일 사이였을 것이다. 결국 김일성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주둔으로 인해 지켜지는 ‘국가의 안보’ 보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로 인해 보장되는 ‘정권의 안전’을 선택하였다.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의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요구를 받아들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중국은 1953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사회주의 체제 건설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주변 국제환경의 안정을 일관되게 추구하였다. 중국의 ‘평화공존 5원칙’은 1953~56년간 국제 분쟁을 피하려는 중국 외교노선의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1953~54년, 중국은 인도, 미얀마 등과 외교 협상을 통해 국경지역의 분쟁을 없애려 노력했고, 1954년 4~6월 제네바 회담에서는 베트남 분쟁 종식과 인도차이나 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 1955년 4월, 중국은 반동회의에 참석하여

55) 1956년 6월 13일, 미코얀은 헝가리 내정에 간섭하여 헝가리 노동자당 제1서기 라코시(Matyas Rakosi)를 해임시키고 거로(Erno Gero)를 후계자로 교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전례가 있었다(Kramer 1998, 179-180).

56) 이에 대해서는 “毛澤東接見尤金談話記錄”(1956年 11月 30日) 참조.

서로 다른 정치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 간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하였다. 1956년 10월, 중국은 폴란드·헝가리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평화공존 5원칙’을 주장하여,<sup>57)</sup>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평등과 상호존중을 역설하였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후 중국의 대북정책 역시 주변 국제정세의 안정을 추구했던 1953~56년 중국 외교방침의 기본 선상에 있었다. 중국은 북한이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한편 대량의 전후 대북 경제원조를 통해 북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1956년 말, 중국이 북한의 중국인민지원군 철군 요구를 받고 비교적 신속하게 병력 철수를 결정했던 것은 철군문제로 인한 중·북 갈등을 피하고 동북아 국제환경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철군 결정은 1953~56년 국제환경의 안정을 추구했던 중국의 외교정책과 중국 국내의 경제발전 및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야 했던 중국의 국내 정책 등으로부터 도출됐던 것이었다.

또한, 모택동이 북한을 폴란드와 헝가리 등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이해했다는 사실은 중공의 중국인민지원군 철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1956년 11월 5일, 평양의 소련대사관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하자는 북한의 의견을 소련정부에 보고하였다. 북한의 제안은 차기 유엔 총회에서 한국전쟁 관련 회원국과 중국이 참석하는 평화회의 개최를 논의하고, 이 같은 평화회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토의하자는 것이었다.<sup>58)</sup> 북한의 제안은 1954년 제네바 회의에서 소련, 중국, 북한 등이 공동으로 건지했던 한반도 문제 처리 원칙과도 위배되는 것이었다.<sup>59)</sup> 북한은 유엔 회원국 중 14개국만이 한국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그 밖의 유엔 회원국들이 평화회의를 개최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지지할 수 있고, 만약 북한의 제의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해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평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sup>60)</sup>

57) 이에 대해서는 “The ‘Malin Notes’ on the Crises in Hungary and Poland, 1956”(CWHP Bulletin, Issue 14/15, 392) 참조.

58) 이에 대해서는 “북한 주재 소련대사 이바노프의 일기(1956년 11월 14일-11월 28일)”(РГАНИ, Ф. 5, оп. 28, д. 11, 287-313) 참조.

59) 이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의 1956년 업무보고(1957년 4월 18일)”(АВНРФ, Ф. 5, оп. 28, п. 103, д. 409, 139-143) 참조.

중국은 한국전쟁 교전 상대방인 유엔을 끌어들이려 한반도 문제를 협의 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접하고 크게 당황하였다. 1956년 11월 30일, 모택동은 북경 주재 소련대사 유딘을 접견하면서 북한의 제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모택동은 헝가리 사건 이후 중국과 소련을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유엔에 의탁하여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한다고 의심하였다.<sup>61)</sup> 1956년 11월 1일, 헝가리 정권이 붕괴되기 직전 나지는 바르샤바 조약 탈퇴와 헝가리의 중립을 선언하며 유엔에 헝가리 문제를 제출하였다.<sup>62)</sup> 헝가리의 나지가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택동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하자는 김일성의 제안을 접하면서 북한이 사회주의 진영을 이탈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다.<sup>63)</sup> 1956년 11월, 북한으로부터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 요구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하자는 제안을 받았던 모택동은 1956년 하반기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포괄하는 당시의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았다. 북한의 철군요구와 한반도 문제에 유엔을 끌어들이겠다는 제안은 1956년 10~11월 폴란드-헝가리 정세의 전개와 유사했고, 만약 중국인민지원군을 철수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사회주의 진영을 이탈하거나 독자노선을 추구할지 모른다는 모택동의 판단은 중국인민지원군 철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 VI. 결 론

1956년 말, 북한은 중국에게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요구하였다. 북한이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을 요구했던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원인에서 기

60) 이에 대해서는 “북한 주재 소련대사 이바노프의 일기(1956년 11월 14일~11월 28일)”(РГАНИ, Ф.5, оп. 28, д. 411, 287-313) 참조.

61) 이에 대해서는 “毛澤東接見尤金談話記錄”(1956년 11월 30일) 참조.

62) 이에 대해서는 “(A/3251) Hungary: request for the inclusion of an additional item in the agenda of the General Assembly, 1 November 1956”(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1956, 1) 참조.

63) 이에 대해서는 “毛澤東接見尤金談話記錄”(1956년 11월 30일) 참조.

인했다. 첫째, 1956년 '8월 중파사건'으로 인해 1956년 9월 중·소로부터 내정간섭을 당한 사건이었다. 북한은 중·소의 내정 간섭 이후 중국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확대되었다. 둘째, 1956년 11월, 소련군에 의한 헝가리 나지 정권의 붕괴가 북한에게 끼쳤던 영향이었다. 소련군이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은 북한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1956년 하반기, 북한이 중·소의 내정 간섭을 겪으며 느꼈던 중국에 대한 불신이 헝가리 나지 정권의 붕괴를 계기로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실질적인 철군 요구로 제기되었다.

1956년 말 무렵, 중국은 북한의 중국인민지원군 철군 요구를 받고 병력 철수를 결정하였다. 중국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결정했던 주요한 까닭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중국이 중·북 갈등을 피하고 동북아 국제환경의 안정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1953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사회주의 체제 건설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주변 국제환경의 안정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중·북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어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상황을 원치 않았다. 둘째, 북한이 사회주의 진영을 이탈하거나 혹은 중·소와 대립하면서 독자노선을 추구할지 모른다는 중국의 의심이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시각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했고 1956년 말 북한의 철군요구와 유엔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는 전략은 1956년 10~11월 폴란드 및 헝가리 사태의 전개와 유사했다. 중국이 철군을 결정할 당시 북한이 사회주의 진영을 이탈할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었지만, 중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병력 철군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의 반중(反中) 성향과 사회주의 진영 이탈 경향이 강화되어 중·북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1958년 10월, 중·북 간 중국인민지원군의 최종적인 철군이 실현됐지만 사실상 철군이 결정됐던 것은 1956년 말 무렵이었다. 또한 중국인민지원군 철군문제는 1956년 하반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되었다. 1956년 하반기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 즉 북한의 '8월 중파사건'에 대한 중·소의 공동 간섭, 헝가리의 사회주의 진영 이탈 시도와 소련군에 의한 나지정권의 붕괴, 북한의 철군 요구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하자는 제안 등이 중국인민지원군 철군문제와 중·

북 관계 전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에 본고는 철군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단순히 중·북 양측 관계만을 분석하지 않고 중·북이 사회주의 진영의 정세변화 속에서 어떠한 입장과 판단을 형성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중국인민지원군 철군문제를 둘러싼 중·북의 입장은 양국 간 상호 신뢰가 견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중·북은 표면적인 우호·협력 관계와는 상반되게 서로를 불신하고 의심했으며, 철군문제에 있어 북한은 정권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중국은 국익의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북은 적어도 철군문제에 관하여 ‘이념적 동맹관계’, ‘형제적 혈맹관계’ 혹은 양국이 긴밀히 연결되어 서로의 이해를 같이하는 ‘순치상의(脣齒相依)’적 관계는 분명히 아니었다. 그런데 본고는 철군의 배경으로서 미·소의 평화분위기 조성, 북·일관계의 개선, 한반도 정세의 상대적 안정 등(김용현 2006, 156-157; 2001, 82) 철군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지 못했고, 특히 중·북이 철군으로 인한 북한의 안보 공백을 자신했던 이유와 중국이 철군을 명분으로 삼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는 측면 등을 분석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후 연구에서 해명해야 할 과제로 남겨 둔다.

| 참고문헌 |

□ 자료

- 김일성(1988).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사업결과 보고.”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編.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第 I 輯: 1期1次會議~1期13次會議)』. 서울: 國土統一院, pp. 617-640.
- 박창욱(1988). “1954~195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에 관한 보고.”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編.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第 I 輯: 1期1次會議~1期13次會議)』. 서울: 國土統一院, pp. 641-661.
-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의 발전 및 그 가일층의 강화의 기본에 관한 쏘련 정부의 선언.” 『로동신문』. 1956년 11월 1일.
-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의 발전 및 그 가일층의 강화의 기본에 관한 쏘련 정부의 선언과 관련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성명.” 『로동신문』. 1956년 11월 3일.
- 안성규(1994). “中國 망명한 延安派 거물들의恨과 충격증언.” 『월간중앙』. 5월호, pp. 556-569.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56년 9월 5일.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56년 9월 29일.
- “조선인민군 병력 축소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성명.” 『로동신문』. 1956년 6월 1일.
- “최창익, 윤공흠, 서희, 리필규, 박창욱 동무들에 대한 규율 문제를 개정할 데 관하여(전원회의 결정 1956년 9월 23일).” 『결정집 1956년도 (전원회의, 정치, 상무, 조직위원회)』(1956).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p. 24.

- “최창익, 윤공흠, 서휘, 리필규, 박창옥 등 동무들의 종파적 음모 행위에 대하여(전원회의 결정 1956년 8월 30~31일).” 『결정집 1956년도 (전원회의, 상무, 정치, 조직위원회)』(1956). 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pp. 12-17.
- “한국휴전협정.”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1989). 『한국전쟁 휴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 361-381.
- 공산권문제연구소 편(1968). 『북한총람(1945~1968)』. 서울: 공산권문제연구소.
- 『국제주의적 친선(195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56).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선중앙년감(1956)』.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哥穆爾卡在波蘭統一工人黨政治局會議上的講話摘要(1956年 10月 12日).” 沈志華 主編(2002). 『蘇聯歷史檔案選編 (第27卷)』.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pp. 22-25.
- “關於個人崇拜及其後果(1956年2月25日).” [俄]尼基塔·謝·赫魯曉夫 著(2005). 『赫魯曉夫回憶錄(選譯本)』. 述弢 譯.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pp. 368-425.
- “緬, 錫, 中, 印等八國代表團團長討論緩和遠東緊張局勢問題 周恩來總理在會上發表聲明.” 『人民日報』. 1955年 4月 24日.
- “毛澤東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 1956年 9月 18日.
- “毛澤東接見朝鮮代表團談話紀要.” 1956年 9月 18日.
- “毛澤東接見尤金談話記錄.” 1956年 11月 30日.
- “毛澤東第二次接見蘇共中央代表團談話記錄.” 1956年 9月 23日.
- “蘇共中央主席團關於派遣蘇共代表團赴波蘭的決定(1956年 10月 18日).” 沈志華 主編(2002). 『蘇聯歷史檔案選編 (第27卷)』.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pp. 26-27.
- “蘇聯政府關於發展和進一步加強蘇聯同其他社會主義國家的友誼和合作的基礎的宣言.” 『人民日報』. 1956年 11月 1日.

- “迎接一九五三年的偉大任務。”『人民日報』. 1953年 1月 1日.
- “停戰以來志願軍與朝鮮黨政軍民關係中的若干問題.” 新華社 編. 『內部參考』. 1956年 12月 8日, pp. 158-163.
-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談判公報.” 『人民日報』. 1953年 11月 24日.
- “志願軍與朝鮮人民關係中存在的一些問題.” 新華社 編. 『內部參考』. 1957年 1月 22日, pp. 427-429.
- “赫魯曉夫的秘密報告.” [意]維·維達利(2006). 『“蘇聯共產黨第二十次代表大會”日記』. 王德樹 譯. 北京: 東方出版社, pp. 225-296.
- “和平共處五原則(1953年 12月 31日).”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1984). 『周恩來選集(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p. 118.
- “(A/3251) Hungary: request for the inclusion of an additional item in the agenda of the General Assembly, 1 November 1956.”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1956). New York, p. 1.
- “CPSU Central Committee Report on the Situation in the KWP and the DPRK, 9 January 1957.”(2008)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CWIHP) Bulletin*. Issue 16. Spring, pp. 520-527.
- “Current Intelligence Weekly Summary(13 February 1958).” 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 pp. 6-8.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55~1957*. Vol. XXIII(1993).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 1-537.
- FRUS 1958~1960*. Vol. XVIII(1994).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 424-713.
- “Memorandum of Conversation with Bak Uiwan, 6 September 1956.” *CWIHP Bulletin*. Issue 16(2008). Spring, pp. 489-491.
- “Memorandum of Conversation with Chinese Ambassador to the DPRK, Qiao Xiaoguang, 4 September 1956.” *CWIHP Bulletin*.

- Issue 16(2008). Spring, pp. 485-486.
- “Memorandum of a Conversation with DPRK Ambassador to the USSR Li Sangjo, 10 September 1956.” *CWIHP Bulletin*. Issue 16(2008). Spring, pp. 491-492.
-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10 May 1955.” *CWIHP Bulletin*. Issue 14/15(2003-2004). Winter-Spring, pp. 107-108.
-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13 April 1955.” *CWIHP Bulletin*. Issue 14/15(2003-2004). Winter-Spring, p. 107.
- “The ‘Malin Notes’ on the Crises in Hungary and Poland, 1956.” *CWIHP Bulletin*. Issue 14/15(1996), pp. 385-410.
- “북한 주재 소련대사 이바노프의 일기(1956년 11월 14일~11월 28일).”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РГАНИ)(러시아 현대 역사 문서보관소). Ф. 5. оп. 28. д. 411, л. 287-313.
- “북한 주재 소련대사 푸자노프의 일기(1957년 7월 5일).”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рхив (АВПРФ)(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외정책 문서). ф. 0102, оп. 13, д. 5, л. 131-145.
- “북한의 정세와 북한 동지와의 회담에서 주의해야하는 기본 문제에 관하여(1955년 4월 7일).” РГАНИ. ф. 5. оп. 28. д. 314, л. 33-3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개인숭배’에 관한 보고(1956년 4월 5일).” РГАНИ. ф. 5. оп. 28. д. 410, л. 57-67.
-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의 1956년 업무보고(1957년 4월 18일).” АВПРФ. Ф. 5, оп. 28, п. 103, д. 409, л. 139-143.

□ 논문 및 단행본

- 김용현(2001).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1950~6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pp. 1-184.
- 김용현(2006). “한국전쟁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2호, pp. 148-162.
- 박영실(2006). “정전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對북한 지원과 철수.”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4호, pp. 265-291.
- 박영실(2010).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 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1-236.
- 박종철(2008). “북한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둘러싼 북중관계 연구.” 『軍事史 研究叢書』. 第5輯, pp. 193-241.
- 이상숙(2009). “1958년 북한주둔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의 원인과 영향: 북한의 대중국 협력 확대와 대중동원 경제 노선 강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pp. 83-107.
- 이종석(2010). “중·소의 북한 내정간섭 사례연구-8월중과사건.” 『세종정책연구』. 제6권. 제2호, pp. 381-419.
- 장창준(2010). “1950년대 북중동맹의 변화에 관한 연구: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과 철수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1-100.
- 駱亦粟(1997). “1956年‘波蘭事件’和中國的政策.” 『外交學院學報』. 第3期, pp. 37-44.
- 師哲(1997). “波匈事件與劉少奇訪蘇.” 『百年潮』. 第2期, pp. 11-17.
- 沈志華(2005). “一九五六年十月危機: 中國的角色和影響-‘波匈事件與中國’研究之一.” 『歷史研究』. 第2期, pp. 119-143.
- 沈志華(2009). “‘唇齒相依’還是‘政治聯姻’? - 中朝同盟的建立及其延續(1946~1961).”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第63期, pp. 147-194.
- 楊奎松(2003). “毛澤東與兩次臺海危機-20世紀50年代中後期中國對美政策變動原因及趨向(續).” 『史學月刊』. 第12期, pp. 52-59.
- Szalontai, Balázs(2003-2004). “You Have No Political Line of Your Own Kim Il Sung and the Soviets, 1953~1964.”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CWIHP) Bulletin*. Issue 14/15.

Winter-Spring, pp. 87-103.

Kramer, Mark(1998). "The Soviet Union and the 1956 Crises in Hungary and Poland: Reassessments and New Findings."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33. No. 2, pp. 163-214.

김일영·조성렬(2009).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파주: 한울.

백학순(2010). 『북한 권력의 역사』. 파주: 한울.

서동만(2005).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1945~1961)』. 서울: 선인.

이중석(2003). 『조선로동당연구-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황장엽(2006). 『황장엽 회고록』. 서울: 시대정신.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2000). 『抗美援朝戰爭史(第3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裴堅章 主編(1994). 『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1949~1956)』.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吳冷西(1995). 『憶毛主席-我親身經歷的若干重大歷史事件片斷』. 北京: 新華出版社.

吳冷西(1999). 『十年論爭(1956~1966)(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2009). 『鄧小平年譜(1904~1974)(中)』.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2009). 『毛澤東傳(1949~1976)(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2011). 『劉少奇傳(下)』.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97). 『周恩來年譜(1949~1976)(中)』.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2011). 『周恩來傳(三)』.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2000). 『陳雲年譜(1905~1995)(中)』.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논문투고일 : 2012년 07월 15일 |

| 논문심사일 : 2012년 07월 18일 |

| 게재 확정일 : 2012년 08월 08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19. No. 2 (2012)

## **The Reason for Withdrawal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and China-North Korea Relations**

**Sang-Jun Han**

(Center for Korean Peninsula Studies, Beijing Univ.)

At the end of 1956, North Korea demanded China to withdraw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from North Korea. Two reasons for North Korea's request for the withdrawal could be presented as follow: First, it was due to the intervention of China and the Soviet Union in "August incident" of 1956. North Korea held grievance against China after the intervention; Second, on November 1956, the collapse of Imre Nagy regime of Hungary by Soviet military forces had an effect on North Korea to require the withdrawal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Around the end of 1956, China agreed to withdraw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There were two major reasons why China had decided to withdraw the troops. First, China wanted to avoid any conflict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nd tried to pursue stability in Northeast Asia. Second, China suspected that North Korea might have left the social camp, or been in conflict wi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to take her own line.

The withdrawal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was executed in 1958, but, in fact, the decision of the withdrawal was made in 1956.

The issues surrounding the troop withdrawal clearly indicate that China and North Korea did not keep a cordial relationship that one may easily imagine. On the contrary, China and North Korea distrusted each other. In the matter of the troop withdrawal, North Korea had to consider the safety of its own regime, and China considered the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its own national interests. In this respect, China and North Korea did not maintain relationship of the "lips and teeth" at least.

Key words: "August incident", Hungarian Crisis, Socialist Camp, Chinese People's Volunteers, China-North Korea Relations